

대한민국 공무원을 무참히 살해 소각한 북한정권을 강력 규탄한다! 국민 생명 보호 책임을 방기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스스로 나와 사건 전모를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보고하라!

윤석열 정부의 해경은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 소각 당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에 대해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16일 밝혔다. ‘월북으로 추정된다’고 했던 문재인 정부의 판단이 1년 9개월 만에 번복된 것이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은 이제라도 국민의 생명이 무참하게 박탈당한 사건의 진실을 밝혀낼 수 있게 되었음을 환영하며,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하고 공정한 진상 조사를 촉구한다.

한변은 대한민국 국민을 잔인하게 총살하고 소각시킨 북한정권의 야만적인 살해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그와 함께,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는커녕 북한정권에 대한 굴종적 저자세로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기에만 급급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련자들이 합당한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한다.

북한정권은 대한민국 공무원을 해상에서 가차없이 무자비하게 총살하고 소각시켜버렸다. 현재 코로나 위기를 이유로 북한정권은 북한주민들을 극단적으로 통제하며 이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주민 생명권도 함부로 무시하고 있는 현실이다. 북한정권에는 생명과 인권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음을 알 수 있다.

살해당한 공무원 이대준씨의 유족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살인방조와 직무유기 죄목으로 고소를 검토 중이라 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련자는 국민 생명 보호 의무를 저버린 것에 대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 사안의 핵심정보는 현재 문재인 정부에 의해 대통령기록물로 봉인되어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북한정권이 대한민국 국민을 살해한 사건 공모자의 혐의를 벗고자 한다면 전모를 밝히고 자백하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은폐시킨 정보를 스스로 공개하라.

문재인 전 대통령은 살해된 공무원 아들에게 편지로서 진상조사 하겠다고 거짓말로 둘러대고,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던져버렸다. 살해된 공무원을 월북자로 몰아붙여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과 여론조작으로 은폐하기에만 급급했다.

한변은 다시금 철저하고 공정한 진상 규명을 촉구한다. 국민의 생명 보호 의무를 버리고 국민을 기만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해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22. 6. 17.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북한인권위원회 위원장 김태훈

